
OGP 제2차 국가실행계획 최종자체평가보고서(안)

- 2015 ~ 2016 -

2016. 9.



대한민국정부

목 차

I. 개요 및 배경	1
II. 국가실행계획 절차	2
III. IRM 권고사항	4
IV. 국가실행계획 추진실적	7
V. 결론 및 향후계획	17
[붙임] 이행과제별 세부내용	18

I 개요 및 배경

한국 정부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에 참여한 이래 2차례에 걸쳐 국가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제1차 국가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등 3개 영역에서 실시간 원문공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한 소통채널 추진 등 8개 이행과제(공약)를 포함하였으며, 제2차 NAP는 민-관 협치 강화,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공개 고도화, 공직자 윤리 강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2014-2016년의 기간 동안에 제2차 NAP에 제시된 5개 이행과제의 추진과정과 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OGP 독립평가기구(Independent Review Mechanism; 이하 ‘IRM’)의 검토와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제1차 및 제2차 NAP 추진과 평가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 등을 참고하여 OGP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가치 실현과 도전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II 국가실행계획 절차

한국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 계획을 통해 열린 정부 구현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NAP는 열린 정부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 추진되어 있는 정부3.0 이니셔티브의 주요 과제들이 제2차 NAP에 반영되어 있는데 정부3.0 이니셔티브는 한국 정부가 전자정부 등 그간 이룩한 정부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국정 운영 전반에 도입·확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3.0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 정부는 공공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개방하는 한편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과 실천적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 증진, 정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부패 방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 등 OGP가 추구하는 열린 정부의 가치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비록 개별적인 방식에 의한 것이지만 제2차 NAP에 제시된 공약사항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 등 열린 정부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3.0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해 2014년 4월 ‘정부3.0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3.0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정부3.0 이니셔티브 추진이 민간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정부3.0 추진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정부3.0 추진위

원회는 정보공개와 데이터 개방,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관 협치 강화 등 제2차 NAP에 제시된 주요 공약사항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사항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뿐 아니라 정책 시행과정에서도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노력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이용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약 35명의 정부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제2차 NAP 계획기간 동안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 연도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이용활성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IRM의 권고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NAP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을 구성하여 기관별 정보공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하고 이를 정보공개 개선에 반영하는 등 일부 제한적인 노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제2차 NAP 수립 및 시행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참여와 기여는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였다.

III IRM 권고사항

OGP 회원국은 절차에 따라 NAP 수립 및 실행 기간 내 공약이행에 관하여 OGP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2차 NAP의 이행상황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OGP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OGP가 한국 정부의 제2차 NAP 이행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가지고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IRM은 제2차 NAP 개발 및 실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시민 참여가 이뤄졌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투명성 의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대부분의 시민사회 단체가 OGP 공약 및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인식제고활동의 수행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공약사항에 관한 IRM의 검토는 제2차 NAP에 제시된 5개의 공약 중 민간부문의 공공데이터 축진을 제외한 4개의 공약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별 공약사항에 IRM의 중간 검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2차 NAP IRM 중간검토 요약표 >

공약명	실시결과
주제 1. 공공서비스 개선	
1-a. 민·관 협치 강화	이 공약은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자 수립됐다. 국민신문고 및 오프라인 전문가 자문 회의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통한 협의 채널 구축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공약 이전에 구축된 여러 전자정부 포럼이 존속되고 있으나 공약의 의의와 뚜렷한 연관이 없다. 검토기간 동안 국민신문고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공 협치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공약은 형성 및 실행에 있어 정부의 현행 관련 정책을 넘어서지 않는다. 민원 처리 일정을 추적하는 기준 지표 등 국민신문고 플랫폼의 효율성 모니터링을 위한 감사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마일스톤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p>1-b.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p>	<p>이 공약은 시민과의 협의 부문에서 5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고 개발함으로써 공공 서비스 개발 및 확대를 도모한다. 민생 요구 해결을 위한 20개 사업만 공개 및 심화 개발되었으므로 완료 수준은 제한적이다. 또한 새로 시작된 공공 서비스는 1개에 불과하다. 이해관계자들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 대상 집단을 위해 이미 양질의 “맞춤”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공약은 기존 정부 서비스의 확대이므로 변용 가능성이 적다.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공약으로 열린 정부 메커니즘을 사용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규 서비스를 개시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p>
<p>주제 2. 공공청렴도 향상</p>	
<p>2-c. 정보공개 고도화</p>	<p>이 공약은 연간 공개되는 문서 수를 증대하고, 시민 감시단체를 구성하고 ‘10대 주요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정보 공개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기간 동안 공개된 데이터 규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돼 있지 않아 완료 수준은 제한적이다. 정부 문서의 대규모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이 공약은 정부가 공개할 데이터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변용성이 보통인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10대 주요 영역’을 정하고 공약 진척도에 대한 공개 모니터링을 촉진해야 한다.</p>
<p>2-d. 공직자 윤리 강화</p>	<p>이 공약은 퇴임 공직자 재임용 감시의 개선, 특히 퇴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고액 급여를 받는 민간고위직을 차지하는 ‘회전문 인사’ 문제 완화를 도모한다. 완료 수준은 미착수로 평가됐다. 검사 계획, 자문단 회의, 온라인 자산 공개 지침 발간 및 검사 결과 등 어떠한 마일스톤에 대해서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p> <p>이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약은 정부 관행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는 투명한 절차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화이트칼라범죄 관련 법적 처벌 규정을 보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p>
<p>주제 3.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p>	
<p>3-e.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p>	<p>이 공약은 정부의 기존 ‘정부 3.0’ 비전을 주로 사용한다. 이 공약은 민간 부문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세트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여 기업의 활용을 돕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토 기간 중 많은 데이터세트가 공개됐다. 2014년 여름부터 시행된 ‘정부 3.0’의 데이터 공개 계획은 혁신적이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데이터의 속성이 더욱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진척도 추적의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세트의 수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가 투명성 프로그램을 통합하고자 할 경우, 정보 공개 청구 처리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p>

(출처 : 대한민국 독립 연구 메커니즘 2014-2015년 진행보고서, OGP IRM Progress Report)

아울러 IRM은 정보공개나 공공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OGP 가치를 보다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책임성과 행정기관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의 5가지는 IRM의 주요한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 OGP 5대 스마트 권고사항 >

<p>권고사항 1. OGP를 위한 관계자 포럼 개발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괄</p>
<p>국가 실천 계획의 초안 및 실행 단계에 이러한 활동을 동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기업 및 기타 다양한 영역의 오픈 데이터 관계자 및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을 포함해 이해관계자를 구성해야 한다.</p>
<p>권고사항 2. 한국 열린정부 핵심과제 파악 및 처리</p>
<p>정부 3.0 공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영역을 적절히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1) 명예훼손법, 국가보안법, 국가 기밀 및 국정원의 향후 방향 2) 정보 자유법상 정보 공개에 대한 모호한 규정 3) 참여,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OGP 가치에 대응하는 전자정부 프로그램</p>
<p>권고사항 3. IRM 절차 참여</p>
<p>일반적인 OGP 회원 지침을 준수하며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p>
<p>권고사항 4. 더욱 진취적이고 측정 가능한 공약 수립</p>
<p>현행 정책보다 더욱 진취적인 공약을 수립한다.</p>
<p>권고사항 5. 국가별 실천 계획 명시</p>
<p>한국 및 국가적 이해관계자 간에 배포 및 홍보할 목적으로 실천 계획을 명시한다.</p>

(출처 : 대한민국 독립 연구 메커니즘 2014-2015년 진행보고서, OGP IRM Progress Report)

IV 국가실행계획 추진실적

한국 정부는 제2차 NAP에서 공공서비스 개선·공공청렴도 향상·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등 3개 영역에 총 5개의 이행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관 협치 강화,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보공개 고도화, 공직자 윤리 강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제2차 NAP 추진을 통하여 이루어진 주요한 활동과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공서비스 개선

1-a. 민·관 협치 강화

한국 정부는 정책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관 별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형태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제안·신고와 정책 토론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소통 창구에 해당한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연결된 기관은 약 900여개로 연간 민원접수·처리규모는 2014년에 169만 건, 2015년에 약 190만 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민·관 협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국민신문고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한 대표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 IRM의 권고사항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일정이나 처리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에, 한국 정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과 행정·제도 등 공공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소셜미디어 기반의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새롭게 구축하여 2016년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은 정책의 “제안→설계→집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자 등이 정책반영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 국민신문고에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참여가 가능한 정책참여 기능도 제공되고 있는데 전자공청회, 정책 토론, 온라인 설문조사 등이 그것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청탁금지법의 합리적 시행방안”, “국민통합과 공공의식”,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범국민적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국세청, 국민대통합위원회 등)이 정책을 수립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제공하였다.

<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등록 안건 및 참여현황 >

(단위 : 건)

연도	전체		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	
	안건	의견	안건	의견	안건	의견	안건	참여
2011	700	71,357	636	66,345	41	612	23	4,400
2012	994	51,676	906	35,341	53	3,594	35	12,741
2013	1,359	44,044	994	3,688	280	11,075	85	29,281
2014	2,869	51,588	2,085	7,716	627	10,257	157	33,615
2015	3,870	74,334	2,642	21,636	976	19,958	252	32,740

(2015년 국민권익백서,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한국 정부는 각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의 전자공청회, 정책 토론, 설문조사 등의 정책 참여기능을 통해 소관 정책에 대해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국민 참여와 토론 결과 공개수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1-b.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자정부의 지속적 추진으로 한국 정부는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 지원정책 등을 모르거나 기관별 또는 업무별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몰라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9월 발표된 정부3.0 발전계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 큰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 이에 각 기관은 기관별 서비스의 성격과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 발굴한 결과 2014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이 407건, 17개 시·도는 172건의 과제를 제출해 총 579건의 과제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 중 통신요금 종합포털인 ‘스마트 초이스’,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국민수요가 큰 50개 과제가 선도과제로 선정되었다.
- 이와 함께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와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중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을 맞춤형으로 통합 안내해 주는 서비스의 신설도 추진되었다.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알려드림e)은 기관별로 산재된 수혜적 공공 서비스를 모두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수

혜자 유형별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우선 임산부, 중소기업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교육, 결혼, 취업, 주택마련 등 9개 서비스 유형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문화와 여가 등 총 32개 유형으로 공공서비스를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② 공공청렴도 향상

2-c. 정보공개 고도화

정보 공개는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서 한국 정부는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방식은 2013년 발표된 정부3.0 이니셔티브 추진을 계기로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기존의 공급자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의 정보공개방식 전환이 그것이다.

-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공개 가능한 정보는 정보 생성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가능하도록 원문정보

공개시스템을 개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이를 도입·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015년에는 157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11,446개 각급 학교에 확산되었으며 2016년에는 116개 공공기관에 동 시스템의 도입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6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율은 45.7%이며, 지방자치단체는 69.9%, 교육청 32.2%, 공공기관은 42.7%에 이르고 있다.

- 정보공개와 더불어 정보공개의 충실성 및 적절성, 수요자 편의성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41명 등이 참여하는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이 구성·운영되었다.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현행화 정도, 정보공개 처리과정의 편의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기관에게 통보되었고,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 개선에 반영토록 하였다. 또한, 국민의 주요 관심분야를 건강, 복지 등 10대 테마로 설정하여 현재에는 12가지 테마로 제공하고 있으며, 공개된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생활 밀착분야 정보를 선정하여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선하여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2-d. 공직자 윤리 강화

한국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제도적 근간으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연고주의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적 풍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전관예우의 문제, 퇴직공무원의 로비스트화 등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의 유착가능성을 방지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공직자가 재직시 알게 된 정보는 특정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특정기업에 취업이 예정된 경우에도 미리 현직에서 미래의 기업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공익의 손상은 물론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근거한다.

- 한국 정부는 공직 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 제도의 시행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2014년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대표적인 개정내용으로 취업제한기간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와 고위공직자의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강화된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를 엄격히 운영한 결과, 취업제한율이 20%를 상회하고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2014년 51명에서 2015년 112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취업제한율은 2013년 9.3%, 2014년에는 19.6%였다. 이는 한국과 유사하게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아울러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2016년 2월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시함으로써 취업 후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이 이뤄질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였다.
- 이와 함께 2015년 11월부터는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공직자윤리법」 상에 명시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약식으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가 운영 개시되어 퇴직자 스스로 재취업 가능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제2차 NAP의 제시된 공약사항 이외에 추가하여 공직자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15년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 하였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법

이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가지는 국가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시행과정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대립과 논란이 예상되는 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조사기관의 신고사무처리 운영지침 표준안 마련 및 배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고위공직자 보유주식관련 이해충돌방지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증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여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백지신탁을 맡기기만 하면 관련 직무를 할 수 있어, 사실상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직무를 할 수 있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였다. 법 시행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직무회피 제도’를 시행하여 회피해야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기초로 매년 공직자 보유 비상장주식 형성과정 등에 대한 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③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3-e.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공공 정보와 함께 공공데이터 역시 국민과 기업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됨으로써 정부 정책에 관해 충분한 분석·이해·판단을 유도하

고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정책결정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정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 기업, 정부 등 광범위한 주체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민관협력의 창의적 서비스 창출로도 연계가 가능하다. 공공데이터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OGP 회원국들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중요 이행과제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선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국 정부 역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2013년 제정·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민간이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자의 지정·게시, 공공데이터목록의 작성·등록·공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에의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부가가치 있는 공공데이터가 우선 개방될 수 있도록 산업 수요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6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하고 2015년~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도 36대 분야 중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 실시간수도정보 등 11대 분야를 개방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국가재난관리정보, 국가공간정보, 부동산거래관리정보 등 22개 분야를 개방할 예정이다.
- 사용자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Open API 형식의 데이터 개방을 늘리고 있다. 2014년 Open API 85종에서 2015년 110종으로 확대 개방하였으며, 2016년 133종 2017년까지 누적 150종으로 지속적으로 개방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데이

터 활용자들이 다양한 시각화 차트를 생성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2016년 3월 공공데이터포털에 시각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교육, 국토관리등 16개 분류에서 영역차트, 막대차트, 버블차트등 14가지 시각화 차트 생성 및 군집 분석, 교차 분석등 5가지 분석이 가능한 도구를 통하여 총175건(현재 2016년 10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Open Square-D(창업지원 공간)를 설립하여 창업인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범부처 차원의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창업가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V 결론 및 향후계획

1차 및 2차 NAP 수립과 이행 과정을 통하여 한국 정부는 OGP 또는 IRM으로부터 몇 가지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다. IRM과 OGP 절차 참여, NAP의 수립과 실행 전반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또는 협력, 개별적이고 측정 가능한 수준의 공약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제3차 NAP를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보된 다음과 같은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 우선, OGP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채널을 개설하여 제3차 NAP 수립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3차 NAP를 실행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나 참여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주기적인 간담회, 공동 세미나 개최를 추진하는 등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점차 넓혀 나가도록 한다.
- 다음으로, 열린 정부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약을 적극 발굴하여 측정이나 점검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공약 선정에 있어 OGP 가치의 실현이나 도전과제 해결에의 기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NAP의 수립과 실행 및 점검 등과 관련하여 OGP나 IRM이 제시하는 절차 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OGP관련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1. 공공서비스 개선				
1-a. 민·관 협치 강화				
주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담당 부서(과) / 직책	국민신문고과 /			
이메일				
전화번호	044-200-7272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주요목적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이행과제 요약	(1) 오프라인으로는 전문가토론, 시민배심원제 등을 활용하고 온라인으로는 SNS, 인터넷 정책토론, 앱 등을 통해 국민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2) 민관협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전파하고 온라인 정책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2015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 토론 시스템을 보급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성과	민관소통증진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 및 일반 시민과의 개별 협의를 포함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구축하여, 주요 정부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참여를 활성화하였다.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수준	상당한 수준	완료
			○	
구체적 활동내역	(1) 온라인 소통 포털 국민신문고의 소통 기능 활성화, 민원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민원행정 개선 노력을 추진하였다.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와 국민행복제안센터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소통하는 정부 구현에 기여하였다. 각급 공공기관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와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민신문고 원스톱 민원처리 가능 기관이 823개에서 901개로 확대하였다.			

	<p>(2) 민관협치우수사례 인 국민디자인단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시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구상하는 국민참여형 정책운영 모델이다. 2014년에 시범 도입한 이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300여명의 시민 등이 참여하여 240여 개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바 있다.</p> <p>(3) 그밖에 정부3.0 디자인단, 생활공감 모니터단, 1365 자원봉사 포털 등이 운영 중이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문가 그룹, 공청회, 토론회, 주민감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 채널이 운영 중에 있다.</p>
종료일	지속
추진 향후계획	2016년 12월까지 총 382개 국민디자인단 구성하여 디자인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며, 국민디자인단 pool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추가 정보	

1. 공공서비스 개선				
1-b. 수요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권영우 사무관			
담당 부서(과) / 직책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서비스 정책관 공공서비스혁신과)			
이메일				
전화번호	02-2100-4065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주요목적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수락·보완함으로써 서비스가 개시되는 '선제적 서비스'의 도입이 목적이다.			
이행과제 요약	(1) 국민수요가 높은 핵심서비스를 정책고객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14년에는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자치단체의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를 50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홍보해나갈 계획이다. (3) '15년에는 선도과제 50선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추가 수요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b. 시민 참여 (v)			
성과 (Ambition)	국민이 서비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누락 방지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민간의 집단지성을 활용, 민·관이 함께 정책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수준	상당한 수준	완료
			○	
구체적 활동내역	(1) 국민수요가 높은 핵심서비스를 쉰 국민 생활밀착 서비스(생활안전, 국민편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아기·엄마, 초·중·고, 대학생·구직자, 어르신), 취약계층 서비스(장애인, 농어촌주민, 소외계층), 기업지원 맞춤형 서비스(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기업)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정책고객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국민 수요가 높은 체감형 서비스 과제를 발굴 추진해왔다.			

	<p>국민의 생애주기(임신-출생-사망), 취약계층 관련 서비스를 국민이 신청하기에 앞서 정부가 일괄 안내하거나 제공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범정부적으로 정부3.0 국민맞춤 서비스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토록 조정·지원하였다. -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시스템(알려드림e)은 기관별로 산재된 수혜적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수혜자 유형별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 우선 임신부, 중소상공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는 교육, 결혼, 취업, 주택마련 등 9개 서비스 유형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문화와 여가 등 총 32개 유형으로 공공서비스를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p>(2) '14년에는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자치단체의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를 50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홍보해나갈 계획이다.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 발굴한 결과 2014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이 407건, 17개 시·도는 172건의 과제를 제출해 총 579건의 과제 발굴이 이루어졌다.</p> <p>(3) '15년에는 선도과제 50선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추가 수요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통신요금 종합포털인 '스마트 초이스',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6개 분야의 주력사업 개발을 완료하였다. <p>'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설계하고 도입했다.</p> <p>1. 50대 주력사업선정 및 부양</p> <p>맞춤형 서비스 선정위원회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맞춤형서비스(플래그쉽 서비스) 대표 50선 목록을 도출하였다.</p>
--	---

연번	과 제 명	주관기관
1	회귀의약품 공급현황 실시간 정보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2	기업 민원처리 및 정보제공 통합서비스(G4B) 운영	미래창조과학부
3	통신요금 종합 포털 '스마트초이스' 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
4	범죄예방 환경 조성(셉테드) 활성화	법무부
5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안내	행정자치부
6	민원24 기반의 생활정보 통합서비스 구축	행정자치부
7	고용·복지·문화 등 지역서비스 통합전담체계 확산	행자부/고용부/복지부 경기도
8	대국민 납부편의를 위한 '간단e납부' 서비스 구현	행정자치부
9	생활안전 지도 확산	행정자치부
10	직불금 원스톱 접수 및 맞춤형 사업안내 서비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11	국민에게 농식품 소비·안전 관련 정보 원스톱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12	농업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 (50선)	보건복지부
14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15	취약독거노인 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16	맞춤형 대기오염예보 서비스 제공	환경부
17	국민이 편리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환경부
18	안전산행을 위한 국립공원 산행정보 서비스 강화	환경부
19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한 이웃사이서비스 제공	환경부
20	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21	산재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산재예방활동 제공	고용노동부
22	V-World(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국토교통부
23	자동차 이력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맞춤형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24	부동산 중개 지원 및 행정서비스 일원화	국토교통부
25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국토교통부
26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	국토교통부
27	보행자 내비게이션(얼음길 도우미) 구축 사업	국토교통부
28	통합 콜택시 서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
29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30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확대시행	국세청
31	스마트 찰단 시스템을 활용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경찰청
32	실종예방을 위한 신원확인 키트보급 및 사전등록 활성화	경찰청
33	휴대폰 GPS-WiFi 원격제어 시스템 도입	경찰청
34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시행	소방방재청
35	농식품 스타 기업 육성 단계별 종합지원 서비스	농촌진흥청
36	제도전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청
3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청
38	지역 유망 중소기업 대상 지원 서비스 통합제공	특허청
39	바다 위의 응급실, 해경청과 보건복지부가 손잡고 의료사각지대 ZERO化	해양경찰청
40	서울시 주차정보 통합안내서비스	서울특별시
41	화재피해주민 원스톱 피해복구 통합지원서비스	부산광역시
42	수요자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대구광역시
43	NFC 모바일 활용 맞춤형 교통서비스	울산광역시
44	소방서비스 사각해소를 위한 공동대응구역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45	광역버스 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기도
46	재난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충청남도
47	철각장애인 등 간편 119 신고체계 구축	전라북도
48	투자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관서비스 제공	경상북도
49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
50	심야 버스이용객 하차지점 자율 선택제 운영	제주도

2. 주력사업 개발

이러한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특징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서비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서비스를 만드는 민관협업 서비스, 미리 알려주는 선제적 서비

	<p>스, 수요자가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최신 ICT를 활용하는 서비스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 서비스 : 통신요금 종합 포털 ‘스마트초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12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종합포털을 개설하여 이용자 맞춤형 통신요금제를 추천하여 이용자가 알뜰한 통신요금을 선택하여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 부처 칸막이로 인해 따로 제공되던 고용과 복지, 금융 등의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2014년 1월부터 전국에 개설되어 구직자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서비스 : “119 간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독거노인, 이주여성 등 의사소통 취약계층이 위급상황 발생 시 유형별 음성이 탑재된 전화기의 단축 버튼만 누르면 119신고가 가능한 서비스가 2014년 3월부터 제공 중이다. ○ 최신 ICT를 활용하는 서비스: “안심귀갓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9월부터 제공하고 있는ICT기반의 여성 대상 “안심귀갓길” 서비스는 도보자용 내비게이션 모바일 앱을 통하여 방문시설 위치기반으로 경로를 안내하고 NFC(근거리무선통신)를 활용하여 위치기반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미리 알려주는 선제적 서비스 : “간단e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과금과 과태료 등을 고지서 없이 인터넷과 은행ATM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서비스를 2015년 1월부터 도입하여 주민생활의 편의 도모를 추구합니다. ○ 민관협업 서비스 : “시민참여형 심정지환자 전문대응 코드블루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9월부터 소방·보건·경찰 등 행정기관과 시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심정지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응급의료 대응기반을 조성하였다. <p>3. 공공서비스 신설(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p> <p>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전문가초청 워크숍·세미나, 서비스 현장방문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맞춤형서비스 관련 토론·강의·민간사례·트렌드·발굴기법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개선 건의 등도 청취하였다.</p> <p>예를 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설계하고 도입했</p>
--	---

	<p>하였다. 전국시행에 앞서 2개의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하였고, 이용국민과 담당 공무원으로 부터 불편사항 등에 대한 개선 건의를 받아 문제점을 개선하였다.</p> <p>특히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문제로 지적된 신청기관 제한(사망자의 주민등록주소지에 시·구, 읍·면·동에서만 신청 가능)을 폐지하여 2016.2.15.부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구,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청자격 제한(민법에서 정한 1순위와 2순위만 신청 가능)도 완화하여 민법에서 정한 3순위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등으로 확대하였다. 조회기관으로 팩스, 인편전달 등 수동식으로 하던 신청정보 이송방식을 민원접수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화 함으로써 업무를 효율화한 사례가 있다.</p> <p>2015.12.15에 도입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도입하였고, 임산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서비스는 4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 중이며, 2016.3.31에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이 서비스 개요는 출산자(산모)가 출산 관련 서비스(양육수당, 전기료감면 등 4종 + 지자체 자체 서비스 5종 내외)를 종전에는 각각 신청하던 것을 한 번에 통합하여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이다.</p> <p>맞춤형 서비스와 관련하여 워크숍 개최현황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대상 정부3.0 국민 맞춤 서비스 워크숍(3.24.) ○ 전문가 초청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연성 인하대교수('14.2.27.), 김상욱 충북대교수('14.6.13.), 이원석 연세대교수('14.6.27.) ○ 일선 서비스 현장방문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관리사무소('14.7.17.) * 조성택교수, 국토부·경찰청·안행부·충남·대전·경북 관계관 등 참석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설계를 위한 임산부 의견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부인과 전문병원, 제일병원('15.9.21.) ○ 주민의견 청취방식 행사 개최
종료일	
추진 향후계획	<p>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설치하여 2017년까지 100개를 설치·운영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연계, 통합이 가능해지고 국민들은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지원받게 된다.</p>
추가 정보	

2. 공공청렴도 향상				
2-c. 정보공개 고도화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정민선 사무관, 양명석 사무관			
담당 부서(과) / 직책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이메일				
전화번호	02-2100-3456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주요목적	정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방식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기존의 공급자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소극적 공개에서 적극적 공개로 정보공개방식의 전환을 추진			
이행과제 요약	(1) '15년부터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예정으로 연간 1억건 이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2) '정보공개 국민 점검단'을 구성하여 기관별 정보공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3) 국민 관심분야는 10대 테마별(건강·복지·식품안전·육아·재정·교육·소비자보호·여가·일자리·주택)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4) 국민관심도가 높은 4대 분야(일자리·복지·안전·재정정보)를 중심으로 공개된 정보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사전정보 공표)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c. 책임성 (v)			
성과 (Ambition)	국민의 알권리 제고와 정책참여, 공직부패 방지와 책임성 확보, 투명한 행정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수준	상당한 수준	완료
		○		
구체적 활동내역	(1) '15년부터는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까지 공개할 예정으로 연간 1억건 이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여, 원문사전공개 근거마련,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범위 확대,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통지절차 개선, 정보공개청구권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공개 가능한 정보는 정보 생성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가능하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지 이를 도입·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48개 중앙행정기관으로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015년에는 157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11,446개 각급 학교에 확산되었으며 2016년에는 116개 공공기관에 동 시스템의 도입이 완료되었다. 2016년 6월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공개율은 45.7%이며, 지방자치단체는 69.9%, 교육청 32.2%, 공공기관은 42.7%에 이르고 있다.

다만, 당초 원문공개대상을 모든 공개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연간 1억건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개인정보, 영업비밀,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사항 등)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 내부업무(시스템 이용신청, 단순 업무 협조 요청 등) 처리를 위한 정보의 공개보다는 정책결정이 되는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를 국민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정보공개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대상으로 원문공개를 추진함에 따라, 2015년에는 680만건의 결재문서를 공개하였다.

(2) '정보공개 국민 점검단'을 구성하여 기관별 정보공개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와 더불어 정보공개의 충실성 및 적절성, 수요자 편의성 등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학계, 시민단체, 일반국민 41명 등이 참여하는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이 14.5.29~14.6.9기간 동안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어 (<http://koreagov30.tistory.com/396>) 구성·운영되었다. 14.5.23~14.8.22을 점검기간으로 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현행화 정도, 정보공개 처리과정의 편의성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로, 사전정보 공표의 표준모델 이행을 저조, 정보목록 분류 미흡 및 목록내 검색기능 부재, 국민관심정보 취약, 관련 없는 정보들 혼재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기관에게 통보되었고,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 개선에 반영토록 하였다.

(3) 국민 관심분야는 10대 테마별(건강·복지·식품안전·육아·재정·교육·소비자보호·여가·일자리·주택)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 공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문정보의 공개를 기존의 10대 테마에서 더 추가하여 현재는 정보공개 포털을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등 12가지의 테마로 제공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일자리(313건), 복지(2,429건), 주택(1,297건), 건강(900건), 여가(5,047건), 안전(9,895건), 여성보육(707건), 행정재정(8,629건), 창조경제(17,009건), 규제개혁(334건), 환경(3,697건), 교육(532,804건)이 있다. 또한, 사전정보 공개 서비

스도 12가지 테마로 제공하는데, 일자리(987건), 복지 (11,319건), 주택(2,806건), 건강(7,612건), 여가(5,879건), 안전(17,744건), 육아(631건), 재정(200건), 교육(19,264건), 소비자보호(108건), 업무추진비(1,261건), 행정처분(315건)이 있다.건)

<사전정보공개 테마별 서비스>

<http://www.open.go.kr/search/theme/theme_bh.do?themecd=00025>

<원문정보공개 테마별 서비스>

<<http://www.open.go.kr/search/theme/theme.do?themecd=00032>>

또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이용 편리성과 공개 정보의 충실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15.2.5~2.13 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 15.3월부터 12월까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모니터링(이용 편리성, 사전정보 공표, 원문정보 공개 등 공개내용 충실성 등), 제도개선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하였고, 712건의 의견 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의견을 정보공개포털에 반영하여 개선·보완하였다.

(4) 국민관심도가 높은 4대 분야(일자리·복지·안전·재정정보)를 중심으로 공개된 정보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전정보공표)

사전공표정보 내실화와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국민생활 밀착분야 정보를 선정하여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국민 관심 4대 분야를 일자리, 복지, 안전, 재정정보로 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검색체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품질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복지포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를 사용자에게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 정보(총 317개)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로의 기능을 개선을 추진하였다. 먼저 중앙부처의 일부 복지사업만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의 상세검색 기능을 확대하여, 사용자와 가족이 신청 가능한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 전체에 대하여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기존 상세검색 대상사업 208개 → 317개 확대) 또한,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용이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찾기' 기능을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별도 구축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 정보를 복지로와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인별 단편적인 복지정보만 제공이 가능했던 기존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을 위해 회원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회원 정보에 따라 생애주기별로 이메일, SMS를 통해 사용자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개선은 2016년 6월까지 추진되었으며 7월

	<p>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재정정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린재정 홈페이지(http://www.openfiscaldata.go.kr/portal/main.do)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재정정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2004년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을 결정하여 민간을 통해 운영하던중, 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높았던 국가재정정보 시스템 운영을 정부가 관리하는 체계로 한국재정정보원(http://www.kpfis.or.kr/lay1/S1T18C74/contents.do)이 2016년 초에 설립되어 운영하도록 방식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시스템적인 개선 및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다.</p>
종료일	—
추진 향후계획	<p>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2,260건에서 6,150건까지 데이터 공개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은 또한 현재 14%수준에서 40%까지 데이터로 예측된 수로 15,700건수 정도 규모로 공개 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통합공개정보시스템 적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원문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유용한 원문정보를 취합·선정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공표 이행율을 연차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p>
추가 정보	

2. 공공청렴도 향상				
2-d. 공직자 윤리 강화				
주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자	한옥주			
담당 부서(과) / 직책	윤리복무국			
이메일				
전화번호	044-201-8476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		
주요목적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제도 시행관련 강화방안, 취업제한율 설정 등을 통해 공공 서비스 윤리 증진으로 부정부패를 방지 및 공공청렴(public integrity)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행과제 요약	(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2)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업심사 강화방안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 (3) '15년부터는 매년 취업제한율을 상향 설정 (4)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도 알리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행·강화 (5)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c. 책임성 (v) d. 기술과 혁신 ()			
성과	공직자 윤리에 관하여 제도적 형성의 적발, 처벌 중심의 결과 주의에서 부패발생 이전 단계에서 사전예방으로 효과 확대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수준	상당한 수준	완료
			○	
구체적 활동내역	(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 '13년 12월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 개선'을 정부의 과제			

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을 4월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가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의 퇴직공직자가 관행적으로 재취업하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철폐하고자, 기존의 계획된 방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14년 4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228회 정례회의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으며 6월에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기관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취업심사, 취업승인심사 및 취업심사 제외협회 요건 강화, 취업심사절차 정상화, 심사결과 공개 등 기준 마련이 의결되었다.

또한,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를 3배이상 확대(3,960개에서 13,466개)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조합 등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2014년 6월 25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후, 취업심사결과를 2014년 7월부터 공개하여 취업심사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였다.

퇴직공직자 재취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각 기관의 자율적 규율기준(안)을 14년 12월 26일에 마련하여, 소속 공직자의 산하 기관, 단체 등에의 재취업 원칙적 금지, 영향력 행사가능성 판단기준 제시 등 자체 취업심사 강화, 임의취업자 발생 최소화 목표 제시, 이해충돌 방지 강화 및 부정행위 청탁, 알선행위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후,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여 14년 12월 30일에 공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취업심사결과 공개 근거 마련 등이 있었다.

(2)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업심사 강화방안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인사혁신처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부터 정책자문을 위해 '14.12.10 "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아래 윤리복무분과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문단은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해당분야의 업무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등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여 선정됩니다. 자문회의는 민간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회의록 역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취업제한 제도 요건 강화 관련 대국민 홍보를 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5년의 경우 매월 1회(9월 미개최, 10월 2회 실시) 퇴직

공무원, 행정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총 12회 개최하였으며, 취업심사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다. 또한, 2016년에도 6월까지 매월 1회 개최하여 총 6회 개최를 하였다. 자문회의 및 회의록은 민간에 공개되지 않으며, 회의 개최 현황의 경우 이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회 개최현황>

http://www.mpm.go.kr/mpm/info/fileBoard/referDataList/?boardId=bbs_0000000000000042&mode=list&category=&pageIndex=1

(3) '15년부터는 매년 취업제한율을 상향 설정

법 개정 이후, 1년간 강화된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를 엄격히 운영한 결과, 취업제한율이 20%를 상회하고 취업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이 두 배 이상 증가('14년 51명 → '15년 112명)하였다.

* 취업제한율(취업제한자/취업심사 신청자)

- '13년 9.3%(27/291), '14년 19.6%(51/260), '15년 20.8%(112/538)

취업심사 운영결과로 퇴직공무원의 관련업무 취업제한율은 2014년 19.6%에서 2015년 20.8%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260명 가운데 51명, 2015년에는 538명 중 112명이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연도	취업심사 신청 건수	취업제한 건수	취업제한율
2011	280	16	5.7%
2012	301	15	5.0%
2013	291	27	9.3%
2014	260	51	19.6%
2015	538	112	20.8%

각 부처에서 업무 관련성 유무를 1차 심사한 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요청한 사안 중 20%이상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취업제한율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프랑스 : '13년 기준 취업제한율은 1%에 불과하고, 취업가능 42%, 조건부 취업가능 41%, 나머지 16%는 서류 미비나 위원회 권한 없음 등으로 인한 반려임

※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일단 취업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취업 후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행위제한제도'를 운영 중임

그러나,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 법이 강화되었다고 취업제한율이 큰 폭으로 높아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로의 재취

업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생계형 재취업 등은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

(4)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도 알리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행·강화

취업제한대상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즉시 "취업제한제도 안내문"을 교부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퇴직시 '취업심사 매뉴얼'을 이메일로 발송하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제도 알리미'와 함께 추가로 퇴직시 취업심사제도 안내에 대한 간략한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하여 대상이 되는 퇴직공직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상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신청 전 대상자 여부 및 취업제한기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예측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

http://www.mpm.go.kr/mpm/info/infoRetire/selftest/selftest_intro/

(5)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2014년 하반기부터 공직자 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하고자 2014년 7월부터 매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제254회 윤리위원회는 2016년 6월 24일에 개최되었는데, 퇴직공직자가 6월에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 중 업무관련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44건, '15년 하반기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82건 등 총 126건을 심사했다. 심사결과는 2016년 6월 30일 공직자 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 결과 공개>

<http://www.gpec.go.kr/servlet/GpecServlet>

이와 함께 당초 제2차 NAP의 제시된 공약사항 이외에 추가하여 공직자 윤리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15년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를 법제화 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주요쟁점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이해충돌상황으로부터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에 걸 맞는 부패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활동으로 2011년 10월 및 2012년 2월에 해당 법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2012년 4월에서 7월에 걸쳐 광주, 대전, 부산 등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협의를 거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이 2015년 1월 12일에 진행이 되었으며, 국회의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은 2015년 3월 3일에 결정이 되어 법 공포를 2015년 3월 27일에 진행하였으며, 법의 시행은 2016년 9월 28일에 진행이 되었다. 2015년 3월 국회 본 회의에서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의원 등 방문 및 입법 촉구를 39회에 걸쳐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KOBACO 공익광고에 송출 등을 하였다. 현재 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및 일반국민 대상 교육 및 홍보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관련 참조 사이트>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

향후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단 구성,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주요쟁점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령 마련, 신고사무운용 지침 표준안 마련, 신고사무운용 지침 표준안 마련을 할 예정이다. 법 시행 시 혼란 예방, 법에 대한 오해 방지 및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공직자,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2) 고위공직자 보유주식관련 이해충돌방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업무관련성 있는 보유주식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 발생 및 비상장 주식보유 관련 형성과정 에 대한 사회적 불신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p>개정된 공직자 윤리법과 그에 따른 직무회피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 관련 업무편람 등을 기초로 매년 공직자 보유 비상장주식 형성과정 등에 관한 집중심사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백지신탁 계약체결 사실 및 백지신탁한 주식 처분완료 사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주요한 성과로는 이해충돌 상황해소 및 신탁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직자 보유 주식 관련 집중심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주 성과로 본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p> <p>1)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제도적 체계 마련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토록 하여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이 되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 부터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후, 주식백지신탁제도 교육 및 홍보, 운영지침을 2014년 12월에 마련하였다.</p> <p>2)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한 청렴도 향상 2015년 8월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직무회피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의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계약 등의 직무에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따라서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하는 신규 의무자들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말지 못하게 하는 '행위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재심 규정도 신설하였다.</p> <p>향후에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과 그에 따른 직무회피제도 운영을 위한 매뉴얼, 관련 업무편람 등을 기초로 매년 공직자 보유 비상장주식 형성과정 등에 관한 집중심사 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백지신탁 계약체결 사실 및 백지신탁한 주식 처분완료 사실에 관한 정보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p>
종료일	지속

<p>추진 향후계획</p>	<p>취업제한율 증가보다는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로의 재취업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생계형 재취업이나 직무전문성 있는 취업은 허용하는 등 합리적인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임</p>
<p>추가 정보</p>	<p>첨부파일 참조</p>

3.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3-e.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활성화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담당자	송희라		
담당 부서(과) / 직책	공공정보정책과 / 사무관		
이메일	apaella@korea.kr		
전화번호	02-2100-3453		
관련자	정부부처 / 부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부문 다자기구 워킹그룹	일반 국민, 민간단체 등 전 국민,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개발자, 기업 등	
주요목적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행정DB 구축, 개방형·표준형 체계로의 전환, 이용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창출 지원이 목적이다.		
이행과제 요약	민간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데이터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하고, 민간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홍보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OGP 가치와의 관련성	a. 정보접근성 (v) b. 시민 참여 (v)		
성과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기업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성공모델을 발굴 확산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이행수준	미착수	제한적 수준	상당한 수준
			○
구체적 활동내역	<p>(1) 산업 수요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6대 '국가중점데이터' 중 건축물정보, 지자체 인·허가, 실시간수도정보 등 11대 분야를 2015년에 개방 완료하였다. 2016년도에는 국가재난관리정보, 국가공간정보, 부동산거래관리정보 등 22개 분야를 개방할 예정이다.</p> <p>(2) 용자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Open API 형식의 데이터 개방을 늘리고 있다. 2014년 Open API 85종에서 2015년 110종으로 확대 개방하였다.</p> <p>(3) 공공데이터 활용자들이 다양한 시각화 차트를 생성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2016년 3월 공공데이터포털에 시각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교육, 국토관리등 16개 분류에서 영역차트, 막대차트, 버블차트등 14가지 시각화 차트 생성 및 군집 분석, 교차 분석등 5가지 분석이 가능한 도구를 통하여 총175건(현</p>		

	<p>재 2016년 10월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p> <p>(4)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1월 Open Square-D(창업지원 공간)를 설립하여 창업인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기업 간 네트워크 및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년 범부처 차원의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 활용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창업가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p>
종료일	지속
추진 향후계획	<p>민간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한다. 2015년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 11개 분야 이외에 25개 분야는 당초, 2017년까지 개방 예정이었으나, 민간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도로명주소, 부동산 거래정보 등 22개 분야 데이터는 2016년에 조기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p> <p>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 부족 및 품질 낮은 데이터 개방은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민간이 신규서비스 개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용량 공공데이터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2016년 21개, 2017년 42개, 그리고 2018년은 주요 핵심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준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p> <p>여러 기관이 보유한 공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개방해야 할 핵심 데이터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100개의 개방 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포털에의 표준데이터 등록시 자가진단을 위한 자동화 도구도 개발될 예정이다.</p>
추가 정보	